

계열사 일괄매각 추진... 채권단, 금호에 5000억 지원?

아시아나 매각 절차는

박삼구 회장일가 보유 지분 담보로 제공
최종구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듯”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산업은행과 아시아나 채권단은 15일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겠다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수정 자구계획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 매각의사를 포함한 수정 자구계획안을 접수했다.

수정 자구계획에 따르면 우선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방식은 구주매각 및 제3자 배정방식의 이상증자로 진행하며 자회사도 별도로 매각하는 것은 금지한다.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세이버, 에어부산 등을 통매각 한다는 의미다.

박삼구 회장 일가가 보유한 지분도 담보로 제공한다. 박삼구 회장 부인 및 장녀가 보유한 금호고속 13만3990주(4.8%)와 금호타이어 담보지분 해



지시 마련되는 박삼구 회장과 아들 박세창 보유지분 119만7498주(42.7%)를 제공한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6868만8063주(33.5%) 지분도 내놓는다.

금호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경영복귀는 없으며, 매각 전까지 아시아나항공 현 대표이사(한창수)가 경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금호그룹이 제시한 수정 자구계획 검토를 위해 이날 오후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지금까지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방안을 조율해 온 만큼, 이번 수정 자구계획은 채권단의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요구했던 5000억원 안팎의 자금수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한 데 대해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듯하다”고 15일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런 발언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담은 수정 자구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한 이후 나온 정부-채권단의 첫 번째 반응이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 매각에 대해) 채권단이 어떻게 할지 입장을 제가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도 “금호 측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므로 채권단이 아마 금호 측의 결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그는 향후 매각 절차에 대한 질문에 “채권단이

(자구계획을) 받아들일 경우에 MOU를 체결하고 직후 매각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다만 아시아나가 작은 회사도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달 걸릴 것이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부분도 있다”면서 “어느 방향으로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아시아나를 매각하는 것이 아닌 산은의 출전전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자세한 부분은 채권단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지원 규모의 경우 “채권단이 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만나 아시아나항공 매각 의사를 전달했으며, 곧바로 매각 방안을 담은 수정 자구계획을 냈다.

산은은 금호아시아나 측이 제시한 수정 자구계획 검토를 위해 채권단 회의를 이날 오후 개최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정부, SOC에 30조 투입... 체육관·보육시설 등 확충

(2022년까지)

정부,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

문화·체육시설 기초인프라에 14.5조 투자
공보육 인프라·의료시설 확충에 2.9조원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를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연합뉴스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학교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해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융결제시스템 개방해야”

최종구,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

“금융결제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시장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방하고 활용해야만 국내 금융기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픈뱅킹 활성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결제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가진 소비자의 재무데이터를 다른 은행이나 제3의 업체와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이미 유럽연합(EU), 영구,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은행결제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폐쇄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은행계좌에서 바로 입출금결제 등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금융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선 올해 중 오픈뱅킹을 통한 결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서비스가 시행돼야 한다”며 “오픈뱅킹이 단순히 핀테크기업만을 위한 시혜적인 인프라가 아닌 만큼 핀테크기업과 은행 모두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여러 은행의 계좌 현황을 동시에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국내 공동 결제시스템은 전 은행 계좌현황 파악은 물론 이체업무가 포함된다. 단단계 높은 수준의 결제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해 글로벌 경쟁시장에 대응하자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시스템인 만큼 시스템안정과 보안수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거래 확대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규모를 예측해 서버증설 등 충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해킹 보이스피싱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도 참여기관의 보안 수준과 점검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 전담 소통창구 운영

>> 1면 ‘국내 인보사도 ‘신장세포’...’서 계속

또 293세포의 종양원성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이 안전하게 제거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추적 조사도 시작된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추적조사도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